

노동운동발전전략(안)을 읽고서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집실장 yoon@kdsi.org

민주노총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가 1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 초안(이하 「보고서」)을 냈다. 아직 최종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큰 기초와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듯 보인다. 위원회 활동에는 민주노총 조직 내부는 물론 학계에서도 참여하였고, 조직 안팎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면, 조직의 참여와 논의는 예상보다 높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관심 역시 그리 크지 않은 듯 하다. 특히 초안 확정을 위해 10월 16일 종로성당에서 열렸던 토론회에는 원래 예정된 토론자들조차 불참하는 모습도 연출되었다. 수고한 사람들의 노력과 공에 비해 조직 안팎에서 그리 만족스러워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여튼 민주노총은 11월 말 이후 한달여에 걸쳐 순회간담회를 조직하고, 「보고서」 내용을 일선 간부 및 조합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요 쟁점들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담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평가라기보다는 필자의 몇몇 관심 영역에 초점을 맞춘 단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가 아직 최종 출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책임 있는 최종 평가는 조직 주체의 몫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평가는 일선 간부와 조합원들이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 담긴 평가는 많은 제한을 갖고 있으며, 필자의 개인적인 입장임을 밝혀둔다.



10월 20일 열린 '신자유주의 사제화 반대 인종의 날' 집회. 반아셈 기조는 아셈에 대한 비판적 기입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1. 평등사회

『보고서』가 내린 이념인 '평등사회'는 "자본주의가 극복되고 평등과 인간다운 삶이 실현된 사회"로, 실제 내용을 볼 때 사회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평등사회'가 지향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 "공공적 소유를 지향하면서 자원배분을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체제", "주요 기업들이 사회화된 사회"는 일반적 의미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이다. '평등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사회주의를 막바로 내세우지 못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곳곳에 건재한 반민주적인 법제도·관행·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내세우는 '평등사회'가 소비에트 체제로 대표되는 '국가사회주의'는 아니다. 『보고서』는 '국가사회주의'의 경직성과 비민주성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하면서 "평등과 효율성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조절 하에서"란 전제를 달았지만 "시장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민주당이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평등사회'를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보고서』가 내건 '평등사회'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대안 사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개량주의의 일종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평등사회'의 내용이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량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흔적이 배어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실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현재의 한국 사회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임을 고려할 때, 개량주의 비판은 실천적으로 공허한 측면이 크다.

2. 정책 및 제도 개선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제도 개선안은 민주노동운동이 지난 10여년간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대부분 담고 있다. 현재의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제시된 정책/제도 개선안이 지니는 의미는 충분하다. 『보고서』가 제시한 안들이 실현된다면,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복지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가 크게 진척되어 노동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제시된 안에 중장기적인 전망이 부족하고, 조직노동자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전사회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다. 특히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산업정책, 동상/무역정책, 남북관계 관련 정책 등이 비어 있으며,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생태나 환경문제, 여성·노인·장애인·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등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사회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정책 역시 빈약하다. 이른 시일 안에 이런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정책/제도 개선안의 외연을 넓힘과 동시에 정책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가미하여 그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정책협가 문제

노동조합 활동의 두 기둥은 교섭과 투쟁이다. 이것은 단위노조는 물론 산별조직과 전국조직 모두에 마찬가지다. 교섭과 투쟁을 조건과 상황에 알맞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작업이야말로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이다. 더군다나 산별노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산별/전국 단위의 교섭과 투쟁 경험을 축적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난 2년 동안 민주노총은 '투쟁 계획'을 연이어 내왔지만, 그에 걸맞은 힘과 실천

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일부에서 말하듯 지도부가 “개량화”되고 상근자들이 “관료화” 되서가 아니라, 전략수립과 전술계획이 객관적 상황과 주체적인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현장의 투쟁동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과 생계불안으로 위축된 노동자 대중의 상태, 약화된 노동조합의 조직력, 무엇보다도 달라진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투쟁 위주의 전술은 장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의 조직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보고서』 역시 전국단위의 투쟁/교섭과 관련해서 여전히 ‘저그제그’ 식의 혼선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노사정위원회 등 3자 기구에서의 “전술적 참가”는 일반적 원칙으로 인정하나, DJ 정권 하에서는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그 근거를 DJ 정부는 “노동배제적인 정권”이고, 노사정위원회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위원회 참가도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인식은 현실의 일면만을 반영할 뿐이다.

정부가 자본이 교섭 테이블에 나올 때, 노동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온다는 사실은 노사정위원회는 물론 각종 정부위원회, 각종 노사위원회, 각종 교섭창구, 심지어는 산별조직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산별중앙교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자본이 참가하는 모든 테이블은 “신자유주의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경험은 “민중권력”(People’s Democracy) 하에서도 “반(反)자유의주의적이고 친노동적인” 교섭 테이블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노동배제성”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교섭테이블을 무조건 거부하는 태도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각종 교섭단위에서의 참가여부는 객관적인 상황과 주체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다. 노동조합 조직력이 약화되고, 운동전열의 투쟁력이 예전만 못한 요즘 상황에서 교섭은 더더욱 중요해진다. 교섭전술을 배제한 일방적인 투쟁전술은 일방적인 교섭전술만큼이나 위험하다.

4. 직선제 문제

『보고서』는 민주노총의 조직상 문제점으로 “낮은 계급대표성,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체계, 조직민주주의의 약화, 조직의 안정성과 운동성 약화”라고 정확히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개혁안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보고서』의 개혁안에는 문제점을 극복하기보다 조직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담겨 있



민주노동 7차 중앙위원회

조직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연맹 위원장 직선제보다는 '전국대의원대회와 같은 핵심적 의사결정기관의 권위와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어 우러된다.

대표적인 것이 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일반 조합원의 직접선출 문제이다. 『보고서』는 직선제를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직선제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직접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의 대의제나 선거과정도 전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무시한 결과로 보인다. 일정한 절차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직선제 역시 간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어떤 사람들은 총연맹 위원장을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선제보다 일반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더 민주적이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조직민주주의 문제를 위원장 선출 과정이라는 '형식' 문제로 치환해버린다. 물론 단위노조 차원의 위원장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단위가 일반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단위노조 위원장에 대한 조합원 직선선출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1987년 이후 조합원 직선을 통한 단위노조 위원장의 선출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민주노조운동을 배태하는 밑거름이었다. 하지만, 총연맹 위원장 직선제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지금 민주노총이 부딪히고 있는 "조직민주주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조합원들이 총연맹 위원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총연맹 위원장을 선출

하는 가맹조직 과건대의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내부의 각급 단위에 대한 일선 조합원들의 참여와 통제가 약화되고 있는데서 비롯한다. 단위노조-산별연맹(노조)-노총의 각급 기구에 대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3년마다 한번씩 있는 총연맹 위원장 선거로 내몬다고 조직민주주의 강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조합원과 활동가의 의식, 노조간부와 지도부의 역량, 노조의 조직력과 집행력 수준을 감안할 때, 총연맹 위원장 직선제는 조직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켜 결국은 내부 단결력과 조직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대표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보고서』가 조직개혁의 방향을 직접민주주의 강화 쪽으로 잡고 있는 것은 옳바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일회성 행위를 통해 결사체 구성원의 권한을 '중앙'이나 '일인'에게 상당 기간 위임하기 보다는 오히려 권한과 책임을 하부단위로 분권화·분산화하여 궁극적으로 구성된 자신의 참여기회와 통제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어느 노동조합도 총연맹 위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으며, 총연맹 가맹단위가 조합원 개개인이 아니라 산별연맹(노조)이라는 점에서 총연맹 위원장 직선제는 조직 체계 및 운영방식에 맞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적인 효과와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논의 없이 직선제를 추진하기보다는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듯이 "조합원의 의식함양, 중간간부와 활동가의 역량 발전, 상간干部的 전문성 강화, 지도부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의사결정 단위와 회의구조를 간소화·정제화하며, 의사결정 단위의 역할과 기능을 서로 중첩되지 않게 잘 정비하고, 의사결정-집행-결과심의의 연결과정을 분명히 하며, 참여대표들을 투명하게 선정 혹은 선출하고", 무엇보다 "전국대의원대회와 같은 핵심적 의사결정기구의 권위와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5. 통일·국제 전략

통일전략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상황 인식이 중요하다. 민족 문제에 대한 관념적 접근은 노동운동의 입장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통일이 정치적·민족적 문제인 동시에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임을 고려한다면, 통일문제에 대한 관념론적 접근법의 위험성과 현실주의적 접근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고서』는 향후의 통일 정세가 “자본주의의 분단고착적 평화공존과 흡수통일이나, 민중주도의 자주적 통일이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 남한 사회에서 통일 정세는 국내의 독점자본의 ‘자본주의 드라이브’에 대한 남한 노동운동/민중운동 진영의 방어투쟁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변화된 정세를 미국-자본 중심의 구도로만 이해하고 민중의 주체적 동력을 과소평가 하는 패배주의적 경향”을 지적하고 있지만, 오히려 운동전영 안에서 “민중의 주체적 동력”은 과대평가되어 왔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남북 국가권력간의 교류가 확대될수록 남한의 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은 모순관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통일전략은 “민족자주세력이 통일단결하여 민중적 통일, 자주적 통일을 쟁취해나가야” 한다는 당위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통일에 대한 견제와 대책을 수립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의 근로자단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직종이 근로자단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국가기구에 가깝다. 민족문제에서의 ‘자주성’이 재금문제에서의 ‘자주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남북교류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는 국제연대와 관련해서도 구체성과 방향성이 부족하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입장 제시가 없으며, WTO에 대해서는 반대입장만 개진되고 있을 뿐이다. 최근 논란되었던 유럽아시아정상회의(ASEM)에 대한 입장정리도 안 보인다. 특히 ASEM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그룹이 ASEM 반대투쟁을 전면에 내세워야 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애틀과 프라하의 투쟁’을 서술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개량주의적” 경향이 “반공주의 선봉대 역할을 했던” 국제자유노련(ICFTU)에 어떤 대중적 논의과정도 없이 가입했던 데서 연유한다고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북반구와 남반구의 진보적 노조운동이 연대하여 ICFTU와 국제산업노련(ITSs)에 공동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시기 국제노동운동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연대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다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ICFTU와 국제산업노련 조직구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둘째 ILO, OECD, UN에서의 노동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WTO와 IMF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민주적 재편(restructuring)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넷째 ASEM과 관련해서는 “비판적 개입전략”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노동

운동과 협력관계를 튼튼히 하고, 개발도상국의 민주적·자주적 노동운동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6. 결론에 대신하여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운동의 전국중앙 상급단체이지 “전위조직”이나 “정치조직”이 아니다. 물론 민주노총은 사회운동의 중심세력이며, 한국 진보운동의 대들보이며, 전체 민중운동의 선두에 서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안에 노동조합 내셔널 센터에 걸맞은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의 “사회운동적” 성격 역시 급속하게 약화될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안팎으로 많은 도전이 밀어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활동은 민주노총의 과거·현재·미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물인 『보고서』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은 일선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충의를 모아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민주노총에 시급한 과제는 내셔널 센터로서의 본래 위상을 바로 잡는데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운동의 전국단위 상급조직으로서의 자기 위상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사회운동 혹은 민중운동의 중심이라는 운동사적 책무 역시 ‘말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동지들의 건투를 기대한다. ❖